

2024 최신 입법 트렌드

2024-5월, 6월

-
1. 최신 발의 법률안
 2. 최신 공포 법률
 3. 국회 동향
 4.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법률들
 5. 제21대 국회 입법의 이모저모

[부록] 제22대 국회 상임위원회별 국회의원 명단



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실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목차

I. 최신 발의 법률안 01

- 5월
- 6월
-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개

[바로가기](#)

II. 최신 공포 법률 08

- 5월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정)
- 6월 - 세월호피해자지원법(개정)

[바로가기](#)

III. 국회 동향 11

[바로가기](#)

IV.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법률들 25

- 입법시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입법시한이 이미 지난 경우

[바로가기](#)

V. 제21대 국회 입법의 이모저모 29

[바로가기](#)

[부록] 제22대 국회 상임위원회별 국회의원 명단 31

[바로가기](#)

I

최신 발의 법률안



1.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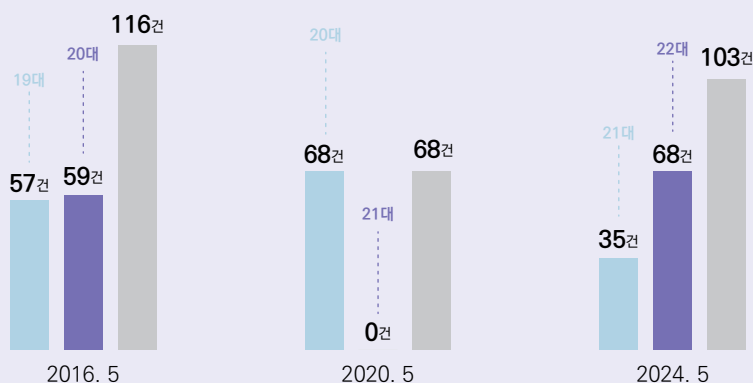
■ 2024년 5월 국회 발의 법률안은 총 103건이다.

- 35건은 제21대 국회인 5월 1일부터 29일 사이에 발의되고, 68건¹⁾은 제22대 국회인 5월 30일 및 31일에 발의되었다.
- 현행 헌법 하의 첫 번째 국회인 제13대 국회가 1988년 5월 30일 개원한 이후, 국회의원 임기 4년마다 5월 29일이면 국회 임기가 만료되고, 5월 30일에 새 국회가 시작된다.
- 2024년에도 제21대 국회가 5월 29일 종료되었고, 4·30총선²⁾으로 제22대 국회가 5월 30일부터 시작하였다.

〈국회 교체 주기별 발의 법률안 건수〉

	5월	5.1. ~ 5. 29.	5.30. 및 5.31.
2024. 5.	103건	35건(21대 국회)	68건
2020. 5.	68건	68건(20대 국회)	0건 ³⁾
2016. 5.	116건	57건(19대 국회)	59건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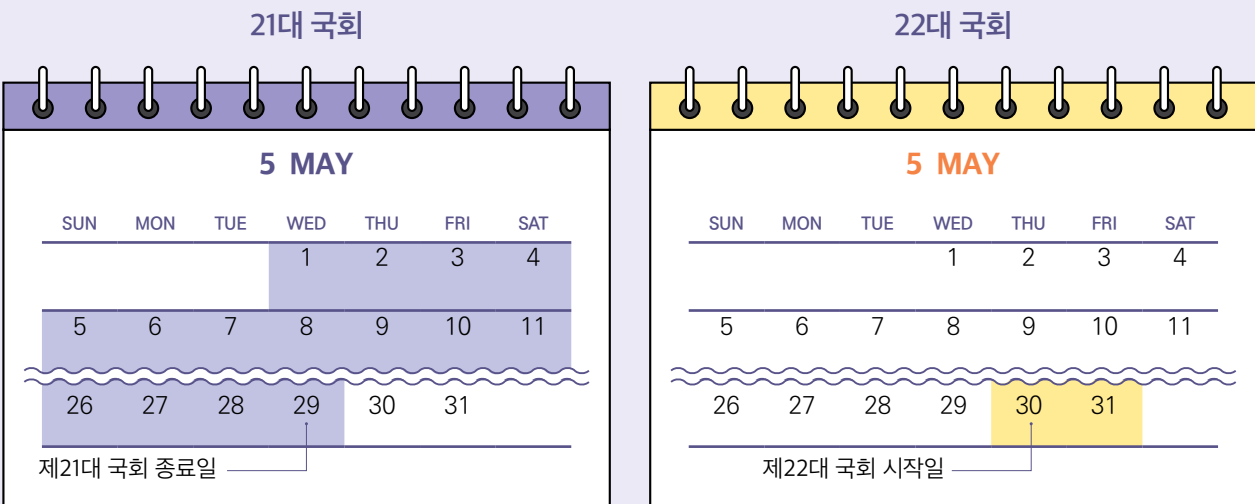
- 1) 68건은 5월 발의되었다가 6월 철회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0042호, 문금주 의원안)”을 포함한 숫자다. 해당 법률안은 철회된 날인 6월 8일 다시 발의되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 2) 4월 30일 총선 결과는 국민의힘(여당) 108석, 더불어민주당 171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 새로운미래 1석으로 나타났고, 제21대 후반기 여소야대 상황이 제22대에도 이어지게 됐다. 당선 횟수로 보면 초선 131명, 재선 80명, 3선 47명, 4선 24명, 5선 14명, 6선은 4명이다.
- 3) 제21대 국회가 시작하는 2020년 5월 30일과 31일이 주말 휴일이었기 때문에 법률안 발의가 없었다.

■ 5월 1일부터 29일 기간 동안 발의된 법률안

- 제21대 국회 임기말인 5월 1일부터 29일까지 발의된 법률안은 35건으로, 4년 전 발의 건수 68건보다 48.5% 감소하였고, 8년 전 발의 건수 57건보다는 38.6% 감소하였다.
- 35건 중 7건은 상임위원회 위원장 대안이며, 28건은 의원 발의안이다.
 - 정부 제출안은 없었다.
- 35건 중 5건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이 중 1건⁴⁾이 공포되었다.
- 과거 시점과의 비교
 - 과거 제20대 및 제19대 국회 마지막 달에는 개정 내용이 비슷한 법률안을 묶어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대안으로 많이 발의하여 통과시켰는데,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았다.
 - 제20대 국회 임기말(2020.5.1.~5.29.): 68건(상임위원장 대안 58건)이 발의되어 61건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었다. 상임위원장 대안 58건은 모두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었다.
 - 제19대 국회 임기말(2016.5.1.~5.29.): 57건(상임위원장 대안 56건)이 발의되어 56건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었다. 통과된 법률안 모두 상임위원장 대안이다.

	5. 1. ~ 5. 29.	의원	상임위원장 대안	통과
제21대 국회 임기말(2024년)	35건	35건	7건	1건 ⁵⁾ (의원)
제20대 국회 임기말(2020년)	68건	68건	58건	61건(대안 58건 포함)
제19대 국회 임기말(2016년)	57건	57건	56건	56건(대안)

* 위 표의 자료는 5월 1일부터 5월 29일 사이에 발의된 법률안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며, 그 전에 발의되어 국회 임기말에 통과된 법률안은 포함되지 않은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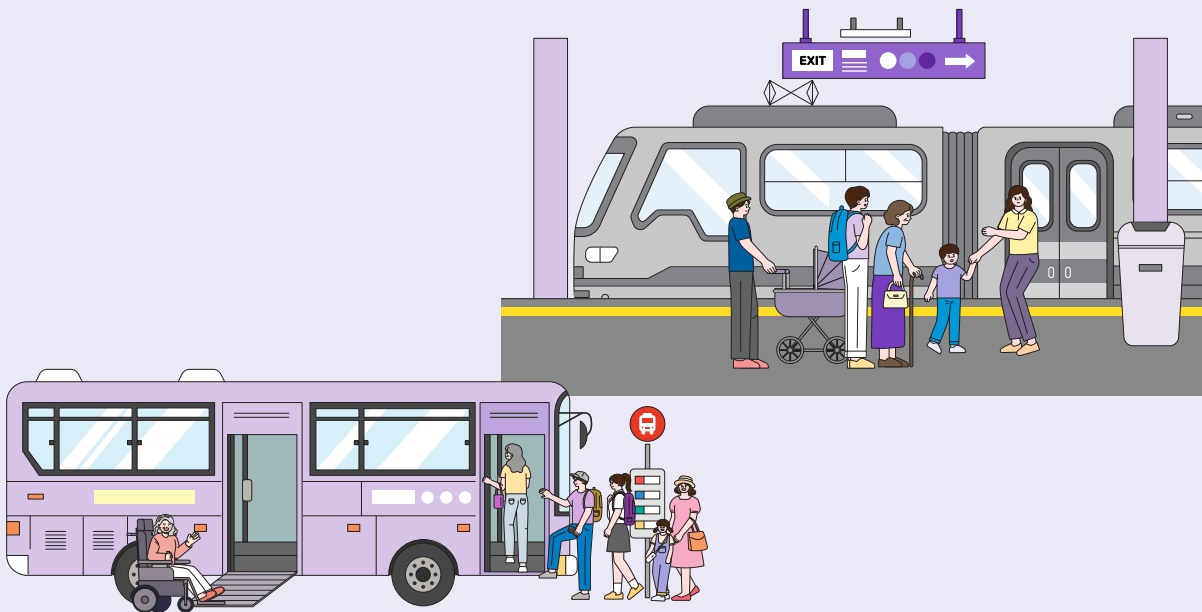


4)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인데, 이에 대한 세부설명은 8쪽 이하에 있다.

5) 5건이 통과되었으나, 공포되지 못한 4건은 제외하여 1건으로 산정하였다.

■ 2024년 5월 30일 및 31일 발의된 법률안

- 제22대 국회 임기초(5. 30. 및 5. 31.)에 발의된 법률안은 68건이다.
 - 68건 모두 의원발의 법률안이다⁶⁾.
 - 8년 전 59건보다 15.3% 증가⁷⁾하였다.
- 68건 중에서 재추진⁸⁾ 법률안은 43건이고, 순수 신규 발의 법률안은 25건이다.
 - 재추진 법률안은 재선의원 중에서 가장 많았다.
 - 순수 신규 발의 법률안은 3선 의원이 가장 많이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1호 발의 법률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제2200001호, 서미화 의원안, 더불어민주당)”이다.



6) 의원발의안만 있고, 상임위원회 위원장안(대안)이나 정부제출안이 없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상임위원회 위원장안〉은 상임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국회 개원 초에는 발의 건수가 없을 수밖에 없다.

〈정부제출안〉은 부처협약,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및 국무회의 등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 제출하기까지 상당기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새 국회가 시작되기 전날까지도 어느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장담할 수 없어, 재추진 입법절차를 미리 준비할 수가 없기 마련이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상임위 위원장안과 정부제출법률안은 모두 국회 개원 한 달여 뒤인 '24년 6월 27일부터 발의되기 시작하였다.

7) 4년 전 같은 기간인 2020. 5. 30.과 5. 31.은 주말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4년 전과의 비교는 무의미하여 생략한다.

8) 제21대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률안을,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 것을 말한다.

2. 6월

■ 2024년 6월 한 달 동안 국회에 발의되거나 제출된 법률안은 총 1,113건이다.

- 발의·제출 주체별로는 의원발의 1,059건, 상임위원장 대안 3건, 정부제출 51건이다.
- 의원발의 1,059건 중 재추진 법률안은 629건, 순수 신규 법률안은 430건이다.

■ 과거 시점과의 비교

- 4년 전인 2020년 6월과의 비교
 - 2024년 6월 의원발의 법률안 1,059건은 4년 전인 2020년 6월 의원발의 법률안 1,137건보다 62건 줄었다.
 - 그런데, 재추진 법률안을 제외한 순수 신규 의원발의 법률안은 2024년 6월 430건으로, 4년 전인 2020년 6월 순수 신규 의원발의 법률안 415건보다 15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년 동기인 2023년 6월과의 비교
 - 2024년 6월 의원발의 법률안 1,059건은 전년 동기인 2023년 6월 의원발의 법률안 548건보다 511건 늘었다.
 - 그런데, 재추진 법률안을 제외한 순수 신규 의원발의 법률안은 2024년 6월 430건으로, 전년 동기 548건*보다 오히려 118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 * 전년 동기인 2023년 6월 발의된 법률안 중에는 재추진 법률안이 없었다.

	전체 건수	의원발의 법률안 ⁹⁾	상임위원장 대안	정부제출 법률안
2024. 6. (제22대 국회 초)	1,113	1,059 · 신규 430 · 재추진 629	3	51 · 신규 17 · 재추진 34
2023. 6.	593	548 · 재추진 없음	28	17
2020. 6. (제21대 국회 초)	1,175	1,137 · 신규 415 · 재추진 722	0	38 · 재추진 자료 미 파악

9) 2024년 6월 의원발의 법률안은 신규 및 재추진 모두 재선의원들이 각각 149건, 216건으로 가장 많이 발의하였고, 2020년 6월 의원발의 법률안은 재추진이 아닌 신규 발의는 초선의원들이 208건으로 가장 많이 발의하였으며, 재추진은 재선의원들이 366건으로 가장 많이 발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3.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개

■ 기본 정보

- 제21대 국회 임기말 발의 법률안 35건 중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6660호)”의 내용을 소개한다.
- 정경희 의원이 2024년 5월 1일 대표발의하였고, 5월 29일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는데, 우리나라가 현재 개인 가정이 대부분 부담하는 양육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나눠 부담하고, 이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¹⁰⁾할 때, 이 법률안은 제22대 국회에 다시 발의될 여지가 많았는데, 최근 6월 26일 황명선 의원안(의안번호 제 2200987호)으로 다시 발의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이혼가정에 대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해 주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 현행 규정(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의 내용

-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울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¹¹⁾이 한시적으로 일정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될 때부터 있던 제도이다(2014. 3. 24. 제정·공포, 2015. 3. 25. 시행).
 - * 양육비 채무자: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조부모가 포함되기도 함)
- 문제점: ①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다.
 -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이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채권자(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와 그 가족의 장애 여부, 질환 유무, 생활수준 등 긴급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긴급지원 대상을 결정한다(영 제8조).
- 문제점: ②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이 제한적이다.
 - 지원 금액은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이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여성가족부 고시)].
 - 지원 기간은 기본 9개월이며,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법 제14조제3항).
- 이와 같은 이유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는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10) 저출산의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의견이 64.3%로 가장 높게 나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인구보건복지협회, 「저출산 국민인식조사」, 2017, 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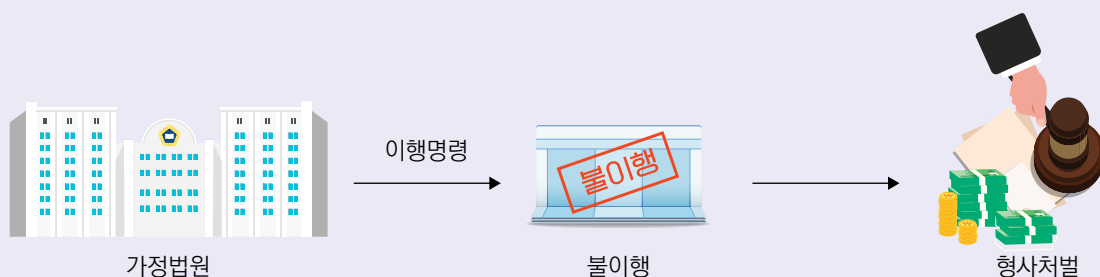
11)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이행법 제7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 개정안 중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내용

- 양육비 채무자(비양육 부·모)가 일정 기간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양육비 채권자의 가구당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등 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권자(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대신 지급한 후,
-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는 제도이다.
-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비양육 부·모) 동의 없이도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 개정안의 다른 내용

- 양육비 채무자(비양육 부·모) 명단공개 절차 간소화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하기 전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주는 소명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하려는 것이다.
 - * 황명선 의원안은 “14일 이상”으로 하고 있다.
- 양육비 채무자(비양육 부·모)에 대한 형사처벌 요건 완화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비양육 부·모)에 대한 형사처벌 요건을 “감치명령에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서 “이행명령 불이행”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다.
 -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렵게 감치명령을 받을 필요 없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을 따르지 않고 양육비를 내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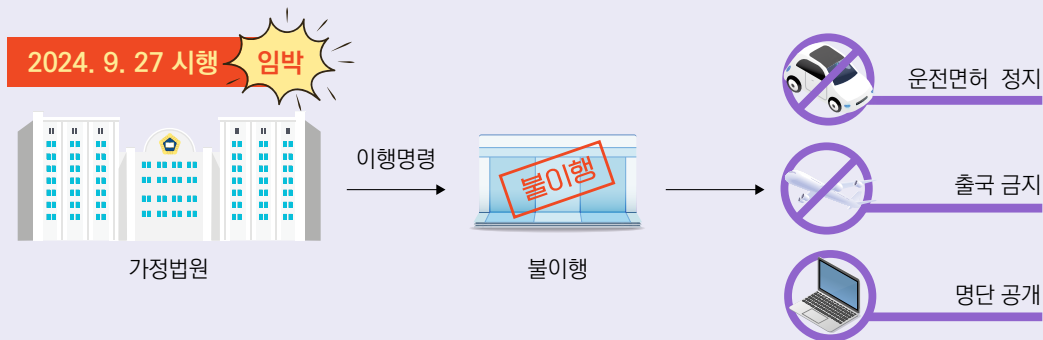


※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요건 완화 ※

- '형사처벌 요건 완화'보다 한발 앞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요건 완화'는 이미 법에 반영되어(2024. 3. 26. 공포), 2024. 9. 27.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비양육 부·모)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요건인 "감치명령에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이 "이행명령 불이행"으로 개정된 것이다.

세부내용

- **(개정 이유)**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해, 감치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처분 조치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기는 하나(운전면허 정지는 2021. 6. 10.부터, 출국금지, 명단공개는 2021. 7. 13.부터 시행),
 - 감치명령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복잡한 절차와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신속한 제재(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가 어렵고, 그 기간 동안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생계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 **(개정된 내용)**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비양육 부·모)에 대한 감치명령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비양육 부·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 *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과 법무부장관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나 출국금지를 하게 된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8호,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
- **(국회)** 양경숙 의원안, 신현영 의원안, 김미애 의원안, 이용선 의원안, 유정주 의원안, 정경희 의원안, 양정숙 의원안의 개정안 내용 일부를 통합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2024. 2. 29. 국회 통과하였다. 김미애 의원, 이용선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양육비이행법 개정이 제22대에서도 계속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II

최신 공포 법률



1. 5월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4년 5월에 공포된 법률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1건¹²⁾뿐이다.

■ 특별법 제정 배경

-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를 즐기던 인파가 밀집하면서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하여 수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하였다¹³⁾.
-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참사로, 과도한 인파 밀집 상황에 대한 관리 부재,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의 안전 대책 등에 대한 사전 준비 부족, 대응 지연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 사고 이후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유족 등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 이를 위한 특별법이 2024년 5월 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5월 21일 공포·시행되었다.

〈 여야 합의로 전격 국회 통과 〉

- (재의요구) 남인순 의원이 2023. 4. 20.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2024. 1.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 19. 정부 이송되었으나, 1. 30. 재의요구되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 (새로 발의) 국회는 남인순 의원안을 재의에 부치는 대신, 재의요구한 취지를 일부 반영한 내용으로 여야가 합의하여 새로운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 법률안은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2024. 5. 1. 대표발의하였고,
 - 다음 날인 5. 2.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까지 모두 원안가결로 통과되었다.
 -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5. 7. 정부이송되어 5. 21. 공포·시행되었다.

12) 공포 기준이 아닌 국회 통과기준으로는 제21대 국회는 1건, 제20대 국회 216건(대안반영폐기 96건 포함), 제19대 국회 196건(대안반영폐기 86건 포함)이다.

13) 사망 159명(남 57명, 여 102명; 내국인 133명, 외국인 26명), 중경상 320명(자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2023, 612쪽).

■ 특별법 주요 내용

○ 진상규명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제6조), 국회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위원 외에 60명 이내에서 직원을 둘 수 있다.
- 활동기간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그 의결로써 조사개시 결정일 한 날부터 **1년**간이다.
*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종합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9조).
- 조사위원회는 10·29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를 위하여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다(제24조부터 제39조까지).
-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나 증언을 하지 않은 증인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제80조제1항, 제79조제2항).

○ 피해자 구제 및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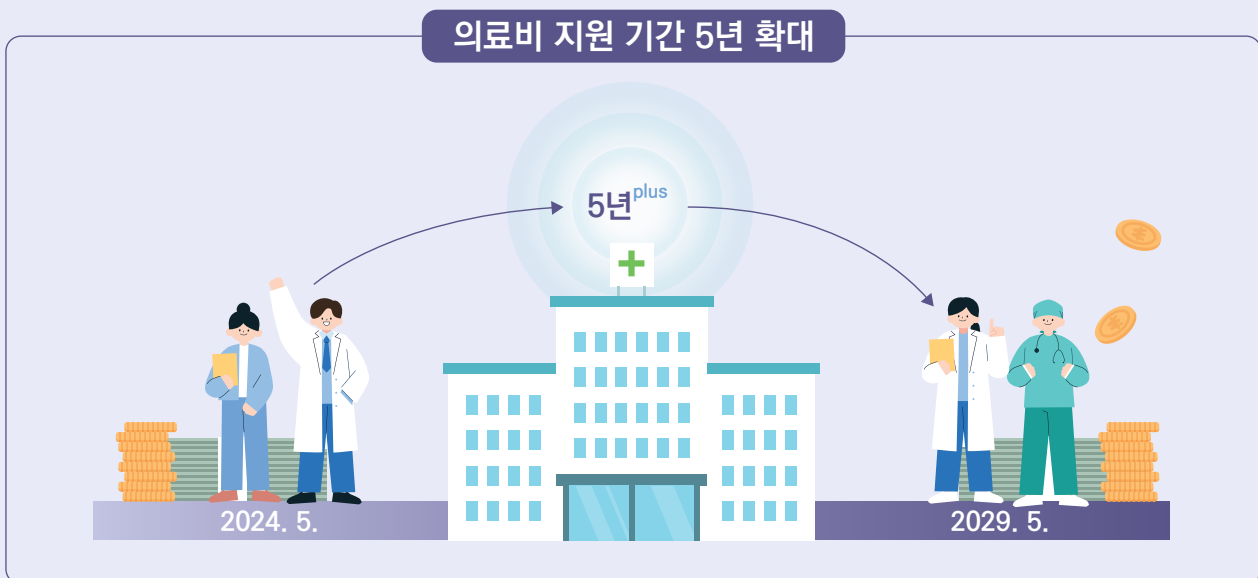
-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를 설치한다(제50조, 제68조).
-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제54조).
-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54조 및 제57조). 세부적인 지원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해야 한다(제65조).
-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 복합시설을 국가 및 유가족단체와 협의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제66조).
-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및 추모비 건립 등의 추모사업을 시행해야 한다(제67조).

- 14) • 의원발의 법률안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데, 긴급히 입법이 필요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국회법」 제82조의2제1항·제2항).
- 또한, 상임위원회는 법률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20일(일부개정법률안은 15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5일)이 지나지 않으면 의안을 상정할 수 없는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회법」 제59조).

2. 6월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2024년 6월에 공포된 법률도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1건뿐이다.
- 이 개정 법률안은 제21대 국회에서 2023년 3월 23일 고영인 의원안으로 발의되었고, 제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직전인 2024년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6월 4일 공포·시행되었다.
- 개정 내용
 - 국가가 참사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과 정신건강의학과 검사·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범위가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까지”임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법 제23조제3항 및 제25조제2항).
 - 시행령에서 지급 범위를 2024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 참사 피해자는 의료지원금 등을 5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III

국회 동향

법률 제·개정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5월과 6월에 개최된 공청회와 토론회 목록¹⁵⁾을 월별, 분야별로 소개한다.

1. 5월

■ 주요 쟁점·이슈 분야

○ AI, 디지털

연번	관련 부처	행사 개요	주최 ¹⁶⁾	장소	일시	
1	방송통신 위원회	FAST 채널의 확산과 콘텐츠 유통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정필모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5. 2.(목) 오전 10시
2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콘텐츠미래융합포럼 18차 정책토론회] 라인 사태 긴급토론회		전용기 의원실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5. 24.(금) 오전 10시 30분
3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미래 R&D 혁신전략 국회 공동 포럼		김종민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5. 27.(월) 오후 1시

15) “<http://assembly.go.kr> 행사캘린더” 참고.

16) 5월 개최된 공청회, 토론회의 경우 ‘주체’는 주체 당시를 기준으로 의원실, 당선인으로 표기하였다. 이하 각 표에서 같다.

연번	관련 부처	행사 개요	주최 ¹⁶⁾	장소	일시	
4	중소벤처 기업부 산업통상 자원부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유통·제조업의 위기		박수영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5. 28.(화) 오전 10시
5	경찰청	무인순찰장비 사용을 위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		박수영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5. 28.(화) 오후 2시

○ 의료개혁

연번	관련 부처	행사 개요	주최	장소	일시
1	보건복지부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안철수 신현영 의원실 이주영 당선인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5. 14.(화) 오후 2시
2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 좌담회	 조명희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5. 16.(목) 오전 10시 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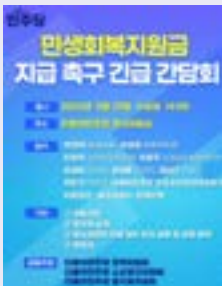
○ 저출산

연번	관련 부처	행사 개요	주최	장소	일시	
1	보건복지부	[돌봄사회 실현을 위한 토론회1] 돌봄민주사회로 가기 위한 첫걸음은?		신동근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5. 2.(목) 오후 2시
2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복지 정책 포럼: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 관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		김상훈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5. 10.(금) 오후 2시
3	보건복지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		윤창현 의원실 나경원 당선인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5. 16.(목) 오전 10시
4	보건복지부	보호출산제, 무엇이 문제인가!		강은미 강성희 용혜인 진선미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5. 22.(수) 오전 10시

○ 일반행정 분야(법, 교육, 재난 등)

연번	관련 부처	행사 개요	주최	장소	일시
1	법무부	비동의강간죄 신설 적절한가?	최승재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5. 3.(금) 오후 1시 30분

연번	관련 부처	행사 개요	주최	장소	일시
2	법무부	검찰개혁 토론회	 2024. 5. 8.(수) 10:00 국회입법조사처 제2소회의실	황운하 김용민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5. 8.(수) 오전 10시
3	행정안전부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	김교흥 우원식 박주민 송재호 권인숙 문진석 윤건영 이형석 이해식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5. 8.(수) 오후 3시
4	법무부 여성가족부	체류 외국인 200만 시대 지방시대, 외국인 정책 추진 방향	 체류 외국인 200만 시대 지방시대, 외국인 정책 추진 방향	한기호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5. 10.(금) 오후 2시
5	교육부	서이초 특별법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	 서이초 특별법 추진을 위한 국회토론회	강득구 강민정 도종환 안민석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5. 14.(화) 오후 3시
6	법무부	채해병 특검법 등 거부권행사 위헌성을 논한다	 채해병 특검법 등 거부권행사 위헌성을 논한다	황운하 의원실 박은정 차규근 신장식 당선인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5. 21.(화) 오전 9시

연번	관련 부처	행사 개요	주최	장소	일시	
7	행정안전부	강원 분권 시대,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추진 현황과 방향		이양수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5. 23.(목) 오후 2시
8	행정안전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촉구 긴급 간담회		민병덕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5. 29.(수) 오후 2시
9	교육부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윤후덕 성일종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5. 31.(금) 오전 10시

○ 경제 분야

연번	관련 부처	행사 개요	주최	장소	일시	
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22대 국회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이동주 의원실 김남근 오세희 이강일 이광희 이용우 임미애 당선인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5. 9.(목) 오전 10시

연번	관련 부처	행사 개요	주최	장소	일시
2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사회적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		유희인 의원실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5. 9.(목) 오후 3시
3	산업통상 자원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과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입법 간담회		이동주 의원실 모경중 이강일 당선인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5. 13.(월) 오후 2시
4	원자력 안전위원회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연속세미나 2차] 원전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양이원영 우원식 김성환 김정호 의원실 박정현 박지혜 임미애 당선인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5. 14.(화) 오전 10시
5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마이데이터 정책의 이슈와 개선과제 토론회		윤창현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5. 21.(화) 오전 10시

○ 조세

연번	관련 부처	행사 개요	주최	장소	일시	
1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기업상속세 개혁,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를 활용하자!		유상범 의원실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5. 7.(화) 오후 2시
2	기획재정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 발족 및 22대국회 조세·재정 분야 입법 방향 모색 토론회		진선미 김상훈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5. 27.(월) 오전 10시

○ 주택

연번	관련 부처	행사 개요	주최	장소	일시	
1	국토교통부	건설부동산 위기 진단과 해법		서병수 의원실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5. 27.(월) 오후 2시
2	국토교통부	누구나집·뉴스테이의 공공성과 분양 방안		허종식 의원실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5. 28.(화) 오전 10시

○ 사회 문화 분야

연번	관련 부처	행사 개요	주최	장소	일시
1	여성가족부	고립·은둔 청소년을 살리는 청소년 상담사의 목소리	 허숙정 고영인 김교흥 김병주 박찬대 신현영 양정숙 이원택 장혜영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5. 9.(목) 오후 2시
2	문화체육 관광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문화정책 평가 국회토론회	 강성희 김영배 의원실 김재원 당선인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5. 9.(목) 오후 2시
3	농림축산 식품부	윤석열정부 출범 2년, 농정공약과 농업정책 평가 토론회	 소병훈 위성곤 의원택 윤미향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5. 13.(월) 오후 1시 30분
4	문화체육 관광부	한글의 로마자 전환법에 대한 국회 정책간담회	 전재수 의원실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5. 24.(금) 오후 3시
5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연대 국회토론회]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사회복지현황 분야별 입법과제)	 서영석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5. 28.(화) 오전 10시

연번	관련 부처	행사 개요	주최	장소	일시	
6	고용노동부	글로벌 선도를 위한 근로복지공단 혁신방안 토론회		진성준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 회의실	5. 30.(목) 오후 2시

○ 노동

연번	관련 부처	행사 개요	주최	장소	일시	
1	고용노동부 중소벤처 기업부	ILO 관점에서 본 ESG경영과 임금보호를 위한 제95호 협약 비준의 필요성		김형동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5. 14.(화) 오전 10시
2	고용노동부	초단기계약방지법, 왜 필요한가?		양경규 의원실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5. 16.(목) 오전 10시
3	고용노동부 법무부	고용허가제 20주년, 주한 송출국 대사관 노무담당관 간담회		이재스민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5. 21.(화) 오후 2시
4	고용노동부	포괄임금제 금지법, 왜 필요한가?		양경규 의원실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5. 23.(목) 오전 10시

○ 연금

연번	관련 부처	행사 개요	주최	장소	일시	
1	보건복지부	2024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세부 분석 기자간담회		김성주 강은미 의원실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5. 1.(수) 오전 10시 30분
2	보건복지부 법무부	메이슨 중재판정문을 통해서 본 삼성물산 불법합병의 문제점과 정부·국민연금의 역할	오기형 의원실 김남근 당선인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5. 27.(월) 오후 2시	

○ 환경

연번	관련 부처	행사 개요	주최	장소	일시	
1	환경부 원자력 안전위원회 산업통상 자원부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연속세미나		우원식 김성환 김정호 양의원영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5. 2.(목) 오전 10시
2	환경부	기후유권자와 22대 기후국회, 연결과 확장		김성환 의원실 김용태 박지혜 서왕진 윤종오 당선인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5. 10.(금) 오전 9시 30분
3	환경부 산업통상 자원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입법토론회		이소영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5. 30.(목) 오후 2시

2. 6월

■ 주요 쟁점·이슈 분야

구분	관련 부처	행사 개요	주최	장소	일시
AI, 디지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대한민국 과학기술 살리기 프로젝트#1]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 토론회	박충권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6. 21.(금) 오전 9시 30분
AI, 디지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SI와 함께하는 미래: 정치환경과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와 대응	윤재옥 의원실 등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6. 27.(목) 오후 4시
AI, 디지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AX 시대, AI 강국 도약을 말한다	안철수 의원실 등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6. 12.(수) 오전 9시 30분
AI, 디지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국회 AI 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 세미나	이인선 의원실 등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6. 26.(수) 오전 9시 30분
AI, 디지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현장 연구자 처우 개선 정책 간담회: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황정아 의원실 등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6. 28.(금) 오후 2시 30분
의료 개혁	보건복지부	AI 의료진단기기의 필요성 평가 심포지엄	민형배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6. 4.(화) 오후 2시
의료 개혁	보건복지부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 보건의로 직능단체 대표자 정책 간담회	김윤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6. 11.(화) 오후 4시
의료 개혁	보건복지부	올바른 의료개혁과 돌봄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대토론회	김윤 의원실 등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6. 4.(화) 오전 10시
의료 개혁	보건복지부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 병원노동자-환자-산업계 긴급 간담회	김윤 의원실 등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6. 27.(목) 오전 10시
의료 개혁	보건복지부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 의료공급체계의 문제점과 공공의료 강화 방안	김선민 의원실 등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6. 20.(목) 오전 10시
의료 개혁	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의료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대안 모색	김윤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6. 22.(토) 오후 3시
의료 개혁	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 구축: 전달체계·거버넌스·재정	김윤 의원실 등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6. 25.(화) 오후 2시
저출산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돌봄사회 실현을 위한 토론회2] 돌봄민주사회로 가기 위한 대안 찾기	남인순 의원실 등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6. 4.(화) 오후 2시
저출산	저출산고령 사회위원회	[출산·양육 정책 포럼] 저출생! 어떻게 할 것인가?	권영세 의원실 등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6. 19.(수) 오전 10시
저출산	법무부	교제폭력방지법 정책토론회: 교제폭력 처벌·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대책 마련	김미애 의원실 등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6. 20.(목) 오후 2시
저출산	저출산고령 사회위원회	저출생 위기의 원인과 해법: 한국은행 저출생 보고서를 중심으로	박주민 의원실 등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6. 11.(화) 오전 7시 30분
저출산	저출산고령 사회위원회	저출생 정책의 패러다임적 전환: 아동수당 확대 및 생애주기별 아동자산 형성 방안	강선우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6. 13.(목) 오후 2시
저출산	보건복지부 교육부	찾아가는 통합돌봄의 미래전략	김윤 의원실 등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6. 28.(금) 오후 3시
저출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취약계층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모색	조은희 의원실 등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6. 20.(목) 오후 2시

■ 일반행정 분야

구분	관련 부처	행사 개요	주최	장소	일시
일반	법무부	[국회의 입법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처분적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	윤재옥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6. 4.(화) 오후 2시
일반	법무부	[뉴노멀시대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워크숍] 범죄 노출 청소년 위기에 대응하라!	강경숙 의원실 등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6. 4.(화) 오전 10시
일반	법무부	제22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 토론회	정춘생 의원실 등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6. 27.(목) 오후 3시
교통	법무부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 압수된 인권, 복제되는 삶	조국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6. 17.(월) 오전 10시
교통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수처법) 개정안 토론회	이성윤 의원실 등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6. 26.(수) 오전 11시
교통	법무부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 개혁 입법 토론회	박은정 의원실 등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6. 12.(수) 오전 10시
금융	법무부	자살로 몰고 가는 범죄수사, 어떻게 바꿀 것인가?	김용민 의원실 등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6. 4.(화) 오전 10시
금융	법무부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남겨진 과제들	이재정 의원실 등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6. 25.(화) 오후 6시
금융	법무부	처벌을 넘어 회복을 지향하는 마약정책을 위한 과제	김윤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6. 26.(수) 오후 2시
금융	교육부	[유아교육 전문성이 확보되는 유보통합을 위한 국회토론회] 유보통합의 올바른 방향을 제안하다	강경숙 의원실 등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6. 5.(수) 오후 3시
방송	교육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백승아 의원실 등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6. 25.(화) 오후 4시
방송	국방부	군사법체계, 강군 육성 기반을 흔들고 있다!	임종득 의원실 등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6. 28.(금) 오후 2시
방송	행정안전부	[강원-전북 특별자치도 공동세미나 2일차] 특별자치도 외국인·이민정책	한병도 의원실 등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6. 20.(목) 오후 2시
주택	행정안전부	[재정 분야 1일차] 전북-강원 특별자치도 공동세미나	한병도 의원실 등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6. 19.(수) 오후 2시
주택	행정안전부	22대 국회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	임미애 의원실 등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6. 27.(목) 오후 1시 30분
주택	행정안전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국제학교 설립 국회 포럼	한기호 의원실 등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6. 18.(화) 오전 10시
주택	행정안전부	강원특별법 3차개정 핵심과제 국회 포럼	유상범 의원실 등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6. 12.(수) 오후 2시
주택	행정안전부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법제화를 중심으로	임미애 의원실 등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6. 12.(수) 오후 2시
주택	행정안전부	제22대 국회 「제주4.3 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	정춘생 의원실 등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6. 3.(월) 오후 1시
주택	행정안전부	제22대 국회 「제주4.3 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	정춘생 의원실 등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6. 3.(월) 오후 1시
지방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제22대 국회의 역할	박정현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6. 26.(수) 오전 10시

■ 경제 분야

구분	관련 부처	행사 개요	주최	장소	일시
일반	중소벤처 기업부	자영업 민생입법 간담회	민병덕 의원실 등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6. 7.(금) 오전 10시
일반	산업통상 자원부	재벌 경제력 집중 및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간담회	오기형 의원실 등	의원회관 제6간 담회의실	6. 11.(화) 오후 1시 30분
일반	기획재정부	현행 부동산 조세 이슈, 어떻게 풀어야 하나?	김은혜 의원실 등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6. 27.(목) 오후 2시
교통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개정 토론회	서미화 의원실 등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6. 18.(화) 오후 2시
교통	국토교통부	수리권 보장: 자동차 정비 및 유지보수 정보 공개 세미나	한준호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6. 28.(금) 오후 2시
교통	국토교통부	철도 지하화의 쟁점과 공공철도의 과제	용혜인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6. 18.(화) 오후 1시
금융	금융위원회	[2024년 금융혁신포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7주년 성과와 과제	박수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6. 25.(화) 오후 2시
금융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향후 과제: 가상자산 규제의 현재와 미래	김성원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6. 27.(목) 오전 10시
금융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의 실효성을 위한 관련 법제 개선	김남근 의원실 등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6. 11.(화) 오전 10시
금융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한 부동산금융생태계 구축 방안	오기형 의원실 등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6. 14.(금) 오후 2시
방송	방송통신 위원회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언론개혁 입법 공청회	한준호 의원실 등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6. 11.(화) 오후 2시
방송	방송통신 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공영방송 영구장악 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이상휘 의원실 등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6. 18.(화) 오후 4시
방송	방송통신 위원회	방송3법 등 언론개혁과 22대 국회의 역할	이훈기 의원실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6. 20.(목) 오전 10시
주택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금융 거버넌스 구조 개선방안: 지역계정 신설 및 민간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오기형 의원실 등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6. 12.(수) 오후 2시
주택	국토교통부	2024년도 한국부동산경제학회 하계 학술발표대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엄태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6. 21.(금) 12시
주택	국토교통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사업지체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김남근 의원실 등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6. 28.(금) 오후 2시
주택	국토교통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모색 연속 간담회. 1회 - 전세대출·보증	윤종오 의원실 등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6. 27.(목) 오후 1시 30분
주택	국토교통부 법무부	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	정점식 의원실 등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6. 13.(목) 오후 2시
주택	국토교통부 법무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1년 평가 토론회	박주민 의원실 등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6. 13.(목) 오후 2시
주택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성일종 의원실 등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6. 17.(월) 오후 2시

■ 사회 문화 분야

구분	관련 부처	행사 개요	주최	장소	일시
노동	고용노동부	[노동입법 세미나 1강] 노동헌법의 의미	김주영 의원실 등	국회의원회관 306호 회의실	6. 26.(수) 오후 5시
노동	고용노동부	[노동입법 세미나 2강]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개별적 근로관계법 구조와 체계(노조법, 근기법 등)	김주영 의원실 등	국회의원회관 306호 회의실	6. 28.(금) 12시
노동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60주년 양대노총 토론회] 산재보험 60주년 평가와 과제	김주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6. 24.(월) 오후 2시
노동	고용노동부	ESG 노동이슈 정립을 위한 22대 국회 정책과제 모색	김현정 의원실 등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6. 10.(월) 오후 2시
노동	고용노동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조정훈 의원실 등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6. 17.(월) 오전 10시
노동	고용노동부	무늬만 사장님 ‘을’의 자영업자·가맹점주들이 말한다	오세희 의원실 등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6. 20.(목) 오후 3시 30분
노동	고용노동부	법률상담 사례로 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불공정 사례 증언 및 제도 개선 토론회	이수진 의원실 등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6. 26.(수) 오전 10시
노동	고용노동부	일요일에도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법이 필요합니다	박주민 의원실 등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6. 25.(화) 오후 1시
노동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서비스노동자 2,387명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증언대회	정혜경 의원실 등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6. 18.(화) 오후 2시
노동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제도 이대로 좋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듣는다	오세희 의원실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6. 10.(월) 오전 10시 30분
노동	고용노동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대법원 현대중공업 단체교섭 청구권 중심으로	김주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6. 26.(수) 오후 2시
문화	문화체육 관광부	[2024 대한민국e스포츠정책포럼] e스포츠, 지속 가능성을 논하다	김성원 의원실 등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6. 7.(금) 오후 2시
문화	문화체육 관광부	2024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방지 특별법 토론회	김재원 의원실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6. 27.(목) 오후 3시
문화	문화체육 관광부	공연, 스포츠 양표(부정판매) 근절 위한 법제도 개선 공청회	김희정 의원실 등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6. 28.(금) 오후 2시 30분
문화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산업 불공정 개선 위한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토론회	강유정 의원실 등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6. 27.(목) 오전 10시
보건	보건복지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의미와 22대 국회의 입법 과제 토론회	정춘생 의원실 등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6. 24.(월) 오후 2시
보건	보건복지부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 방향	민병덕 의원실 등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6. 4.(화) 오전 10시
보건	보건복지부	제1회 K뷰티 활성화포럼: 반영구 화장·타투·SMP 등 비의료인 문신 합법화 위한 입법 촉구	엄태영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6. 19.(수) 오전 9시
보건	보건복지부	중독(中毒) 우리 국민이 위험하다: 국가 수준 중독치료·재활 체계의 필요성	한지아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6. 25.(화) 오후 2시
연금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토론회: 기초에 선 연금개혁의 방향	이상휘 의원실 등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6. 22.(토) 오후 3시

IV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법률들

- 헌법재판소에서 ‘과잉금지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 적법절차원칙 위반 등’의 이유로 헌법에 불합치다고 결정된 법 조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 그런데, 헌법결정문의 취지를 반영한 법 개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 이를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입법시한을 기준으로 하여 입법시한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와 입법시한이 이미 지난 경우로 나눠서 소개한다.

1. 입법시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

대상조문	사건번호 ¹⁷⁾ (결정일)	입법시한	결정요지
경비업법 제7조제5호 제19조제1항제2호	2020헌가19 (2023. 3. 23.)	2024. 12. 31.	• 시설경비업을 허가받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를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조문 관련 • 과잉금지원칙 위반 경비원의 비경비업무 종사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하여 경비업무에 대한 전념성의 훼손 정도에 관계없이 필요적으로(반드시) 경비업 전체를 허가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10항	2019헌마1165 (2023. 9. 26.)	2025. 6. 30.	•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내국인 등과 달리, 다음 달부터 곧바로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한 조문 관련 • 평등권 침해 과거 보험료를 납부한 횟수나 개별적인 경제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단 1회의 보험료 체납만으로도 일률적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체납한 보험료를 사후에 완납하더라도 예외 없이 소급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을 내국인 등과 달리 취급한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17)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사건번호의 의미

- 헌가: 위헌법률심판(법원의 제청에 의한 경우)
- 헌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 헌바: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심판
 - * 위헌법률심판형이란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하여 당사자가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형식으로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를 말함
- 헌나: 탄핵심판/ 헌다: 정당해산심판/ 헌라: 권한쟁의심판/ 헌사: 가처분/ 헌아: 재심

대상조문	사건번호 (결정일)	입법시한	결정요지
민법 제815조제2호	2018헌바115 (2022. 10. 27.)	2024. 12. 31.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문 관련 - 과잉금지원칙 위반 근친혼의 구체적 양상을 살피지 않고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일률적·확일적으로 혼인 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혼인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신뢰한 당사자나 그 자녀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민법 제1112조 제1118조	2020헌가4, 2021헌가29, 2021헌바295 등 (병합) (2024. 4. 25.)	2025. 12. 31.	-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유로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여,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법률상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 관련 - 헌법불합치결정 - 한정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인바, ①민법 제1112조에서 패륜을 유류분 상실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과 ②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는 재산권을 침해한다. - 형제자매의 유류분: 단순위헌결정 특히,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유류분을 부여하는 제1112조제4호에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단순위헌결정을 하였다.
약사법 제16조제1항	2000헌바84 (2002. 9. 19.)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문 관련 - 평등권 침해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을 개설·운영하려고 하는 약사들 및 이들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다른 전문직과 달리 약사에게만 업무수행을 위한 법인 설립을 제한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제1항	2020헌가1, 2021헌가10 (병합) (2023. 3. 23.)	2025. 5. 31.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문 관련 -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 위반 보호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의 상한이 마련되지 않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보호시설에서의 보호의 개시나 연장 단계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가 없고, 행정상 인신구속을 함에 있어 의견제출 기회도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2. 입법시한이 이미 지난 경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 개정안과 「형법」 제269조제1항 및 제270조제1항(자기 낙태죄 및 의사낙태죄) 개정안¹⁸⁾이 제21대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제22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 관련 개정안은 6월 27일 국회에 다시 발의되었다.

대상조문	사건번호 (결정일)	입법시한	결정요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제6호의4	2020헌마1181 (2022. 11. 24.)	2024. 5. 31. (경과)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국가공무원 또는 부서관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한 조문 관련 • 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범죄의 종류, 죄질 등은 지극히 다양함. 개별 범죄의 비난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충분을 달성할 수 있는바, 일률적으로 영구히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4	2020헌마1605, 2022헌마1276 (병합, 2023.6.29)	2024. 5. 31. (경과)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한 조문 관련 • 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범죄의 종류, 죄질 등은 다양함. 개별 범죄의 비난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충분을 달성할 수 있는바, 일률적으로 영구히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보안관찰법 제6조제2항 제27조제2항	2017헌바479 (2021. 6. 24.)	2023. 6. 30. (경과)	•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애초 신고한 거주예정지 등 정보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7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조문 관련 • 과잉금지원칙 위반 재범 위험성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게,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사람과 유사한 신고의무와 위반 시 동일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18)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과 관련하여, 제21대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은 박주민 의원안(2020. 11. 27.) 등 5건의 의원입법이 발의되었는데, 모두 임기만으로 폐기되었다. 형법 개정안과 관련이 있는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정부 제출안(2020. 11. 18.) 및 박주민 의원안 등 6건의 의원입법 등 7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모두 임기만으로 폐기되었다.

대상조문	사건번호 (결정일)	입법시한	결정요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3조제1호	2008헌가25 (2009. 9. 24.)	2010. 6. 30. (경과)	•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문 관련 • 과잉금지원칙 위반 옥외집회 금지 시간대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광범위하게 정하여 낮 시간이 짧은 동절기 평일의 경우 직장인이나 학생은 사실상 집회를 주최하거나 참가할 수 없게 되므로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하고, 그 허용 여부를 행정청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 이상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어 법익균형성도 갖추지 못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호 · 제3호 제23조제1호	2018헌바48, 2019 헌가1 (병합) (2022. 12. 22.)	2024. 5. 31. (경과)	•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조문 관련 • 과잉금지원칙 위반 대통령 관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금지장소로 설정하여 대통령 등의 안전이나 관저 출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장소의 소규모 집회 등을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2021헌가1 (2023. 3. 23.)	2024. 5. 31. (경과)	•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조문 관련 • 과잉금지원칙 위반 국회의장 공관의 기능과 안녕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 집회까지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형법 제269조제1항 제270조제1항	2017헌바127 (2019. 4. 11.)	2020. 12. 31. (경과)	• 낙태죄 임신한 여성의 자기 낙태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조문 및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조문 관련 • 과잉금지원칙 위반 형법에서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임신의 유지·출산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데, 그 정도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헌법재판소는 현행 모자보건법상 낙태 정당화 사유에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갈등 상황이 전혀 포섭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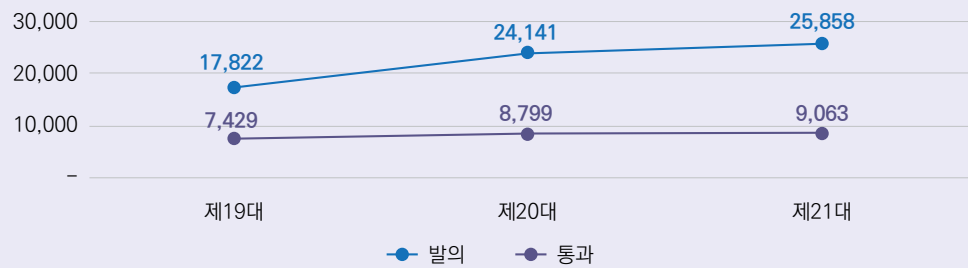


V

제21대 국회 입법의 이모저모

■ 제21대 국회는 법률안 발의 건수 및 통과 건수가 가장 많았다.

○ 법률안 발의 건수는 총 25,858건이며, 통과 건수는 9,063건에 이른다.



	국회 발의 건수			국회 통과 건수*			
	의원	정부	합계	의원	정부	합계	
제21대	25,027	831	25,858	8,576	487	9,063	(2,533)**
제20대	23,047	1,094	24,141	8,061	738	8,799	(2,852)**
제19대	16,729	1,093	17,822	6,626	803	7,429	(2,442)**

* 위 표에서 국회 통과 건수는 '대안반영되어 폐기된 법률안 6,530건'이 포함된 숫자임

** 위 표에서 () 안의 숫자는 '국회 통과 건수 합계'에서 '대안반영되어 폐기된 법률안 건수'를 제외한 숫자임

■ 법률안 발의 주체별 법률안 발의 건수

- 국민의힘 8,224건, 더불어민주당 14,149건, 녹색정의당 378건, 열린민주당 6건, 시대전환당 39건, 기본소득당 37건, 진보당 11건, 무소속 811건
- 상임위원회 위원장안 1,372건¹⁹⁾
- 정부 831건

■ 개정안 발의가 가장 많은 법률 10건

- 제21대 국회 하반기(2022년 5월 10일 이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409건), 공직선거법(211건), 지방세특례제한법(176건), 국회법(122건), 소득세법(122건), 도로교통법(115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93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92건), 근로기준법(73건), 전기통신사업법(73건)에 대한 개정안이 많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19) 상임위원회 위원장안 1,372건 중 대안은 1,360건이다.

■ 제21대 국회 상임위원회별 분석

- 법률안 발의 건수 및 국회 통과 건수 기준 1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률안 발의 건수 및 국회 통과 건수 모두 행정안전위원회가 각각 3,610건 및 1,340건으로 가장 많았다.
- 법률안 국회 통과율 기준 1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법률안 국회 통과율은 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44.0%로 가장 높았다.
 - <제21대 국회 상임위원회별 법률안 발의 건수, 국회 통과 건수, 국회 통과율 비교표>

소관 위원회	전체 발의 건수	국회 통과 건수*	국회 통과율
국회운영위원회	431	55	12.7%
법제사법위원회	2,172	448	20.6%
정무위원회	1,949	594	30.4%
기획재정위원회	2,375	962	40.5%
교육위원회	1,188	366	30.8%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1,039	356	34.2%
외교통일위원회	285	92	32.2%
국방위원회	591	247	41.7%
행정안전위원회	3,610	1,340	37.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022	450	44.0%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542	655	42.4%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1,540	645	41.8%
보건복지위원회	2,832	991	34.9%
환경노동위원회	2,174	650	29.8%
국토교통위원회	2,347	931	39.6%
정보위원회	27	9	33.3%
여성가족위원회	442	117	26.4%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생경제 안정특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	268	155	57.8%
발의 후 철회	24	0	0.0%
총계	25,858	9,063	35.0%

* 국회 통과 건수의 경우 대안반영폐기가 포함된 숫자임.

부록

제22대 국회 상임위원회별 국회의원 명단*

1. 국회운영위원회

- 위원장: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간사: 배준영(국민의힘),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여당(10명): 배준영, 강명구, 강민국, 권영진, 김정재, 배현진, 임이자, 정성국, 주진우, 추경호
- 야당(18명): 박찬대, 박성준, 강유정, 고민정, 곽상언, 노종면, 박수현, 부승찬, 서미화, 윤건영, 윤종균, 이소영, 임광현, 정을호, 정진욱, 추미애, 신장식, 천하람

2. 법제사법위원회

- 위원장: 정청래(더불어민주당)
- 간사: 선임하지 않음(국민의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여당(7명): 곽균택, 박준태, 송석준, 유상범, 장동혁, 조배숙, 주진우
- 야당(11명): 정청래, 김승원, 김용민, 박균택, 박지원, 서영교, 이건태, 이성윤, 장경태, 전현희, 박은정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유상범, 장동혁, 김승원(소위원장), 박균택, 서영교, 이성윤, 전현희
 -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미완): 장경태(소위원장), 김승원, 김용민, 박지원, 이건태, 이성윤, 박은정
 - 청원심사소위원회: 유상범, 김용민(소위원장), 김승원, 박지원, 서영교

3. 정무위원회

- 위원장: 윤한홍(국민의힘)
- 간사: 선임하지 않음
- 여당(8명): 윤한홍, 강명구, 강민국, 권성동, 김상훈, 김재섭, 유명하, 이현승
- 야당(16명): 강준현, 강훈식, 김남근, 김병기,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박상혁, 유동수, 이강일, 이인영, 이정문, 조승래, 천준호, 신장식, 한창민

4. 기획재정위원회

- 위원장: 송언석(국민의힘)
- 간사: 박수영(국민의힘),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여당(9명): 박수영, 구자근, 박대출, 박성훈, 박수민, 이인선, 이종욱, 최은석
- 야당(17명): 정태호, 김영진, 김영환, 김태년, 박홍근, 신영대, 안도걸, 오기형, 윤호중, 임광현, 정성호, 정일영, 진성준, 최기상, 황명선, 차규근, 천하람

* 2024. 7. 12.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5. 교육위원회

- 위원장: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간사: 조정훈(국민의힘),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여당(6명): 조정훈, 김대식, 김민전, 김용태, 서지영, 정성국
- 야당(10명): 김영호, 문정복, 고민정, 김문수, 김준혁, 박성준, 백승아, 정을호, 진선미, 강경숙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위원장: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간사: 최형두(국민의힘), 김현(더불어민주당)
- 여당(7명): 최형두, 김장겸, 박정훈, 박충권, 신성범, 이상휘, 최수진
- 야당(13명): 최민희, 김현, 김우영, 노종면, 박민규, 이정현,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한민수, 황정아, 이준석, 이해민
-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최형두(소위원장), 박정훈, 박충권, 김우영, 박민규, 조인철, 황정아, 이준석
-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김장겸, 신성범, 이상휘, 최형두, 김현(소위원장), 노종면, 이정현, 이훈기, 한민수, 이해민
- 청원심사소위원회: 김장겸(소위원장), 이상휘, 박민규, 이정현, 정동영, 조인철, 이준석

7. 외교통일위원회

- 위원장: 김석기(국민의힘)
- 간사: 선임하지 않음
- 여당(8명): 김석기,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태호, 안철수, 윤상현, 인요한
- 야당(13명): 권철승, 권영배, 위성락, 윤후덕, 이용선, 이재강, 이재명, 이재정, 조정식, 차지호, 한정애, 홍기원, 김준형

8. 국방위원회

- 위원장: 성일종(국민의힘)
- 간사: 선임하지 않음
- 여당(6명): 성일종, 강대식, 강선영, 유용원, 임종득, 한기호
- 야당(11명): 김민석, 김병주, 박범계, 박선원, 박찬대, 부승찬, 안규백, 추미애, 허영, 황희, 조국

9. 행정안전위원회

- 위원장: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간사: 조은희(국민의힘),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여당(8명): 조은희, 김상욱, 김종양, 배준영, 이달희, 이성권, 정동만, 조승환
- 야당(14명): 신정훈, 윤건영, 김성희, 모경종, 박정현, 양부남, 위성곤, 이광희, 이상식, 이해식, 채현일, 한병도, 용혜인, 정춘생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위원장: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간사: 박정하(국민의힘),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여당(6명): 박정하, 김승수, 배현진, 신동욱, 정연욱, 진종오
- 야당(10명): 전재수, 임오경, 강유정, 김윤덕, 민형배, 박수현, 양문석, 이기현, 조계원, 김재원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위원장: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간사: 정희용(국민의힘),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여당(7명): 정희용, 김선교, 박덕흠, 서천호, 이만희, 이양수, 조경태
- 야당(12명): 어기구, 이원택, 문금주, 문대림, 서삼석, 송옥주, 윤준병, 이병진, 임미애, 임호선, 주철현, 전종덕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위원장: 이철규(국민의힘)
- 간사: 박성민(국민의힘),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여당(11명): 박성민, 강승규, 고동진, 김성원, 나경원, 박상웅, 박형수, 서일준, 이종배, 주호영
- 야당(19명): 이철규, 김원이, 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동아, 김성환, 김정호, 김한규, 박지혜, 송재봉, 오세희, 이언주, 이재관, 장철민, 정진욱, 허성무, 허종식, 김종민, 서왕진

13. 보건복지위원회

- 위원장: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간사: 김미애(국민의힘), 강선우(더불어민주당)
- 여당(8명): 김미애, 김예지, 백종현, 서명옥, 안상훈, 최보윤, 추경호, 한지아
- 야당(16명): 박주민, 강선우,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이개호,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 김선민, 이주영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김미애, 서명옥, 안상훈, 최보윤, 강선우(소위원장), 김윤, 남인순, 백혜련, 서영석, 이개호, 이수진, 전진숙, 이주영
-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김미애(소위원장), 김예지, 백종현, 한지아, 강선우, 김남희, 박희승, 서미화, 소병훈, 장종태, 김선민
- 청원심사소위원회: 백종현(소위원장), 강선우, 남인순

14. 환경노동위원회

- 위원장: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간사: 김형동(국민의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여당(6명): 김형동, 김소희, 김위상, 우재준, 임이자, 조지연
- 야당(10명): 안호영, 김주영, 강득구, 김태선, 박정,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이학영, 정혜경
-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김형동(소위원장), 김소희, 조지연, 강득구, 김주영, 박정, 박해철, 이학영
-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김위상, 김형동, 우재준, 김주영(소위원장), 김태선, 박홍배, 이용우, 정혜경
- 청원심사소위원회: 김위상, 이용우(소위원장), 박정
- 안건조정위원회: 김형동, 우재준, 김주영, 이용우, 이학영, 정혜경

15. 국토교통위원회

- 위원장: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간사: 권영진(국민의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여당(11명): 권영진, 권영세, 김도읍, 김은혜, 김정재, 김희정, 서범수, 엄태영, 윤영석, 윤재옥, 정점식
- 야당(19명): 맹성규, 문진석, 김기표, 민홍철, 박용갑, 복기왕, 손명수, 송기현, 안태준, 엄태영, 윤종균, 이소영, 이연희, 이춘석, 전용기, 정준호, 한준호, 윤종오, 황운하
-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권영진(소위원장), 김은혜, 김정재, 서범수, 윤영석, 김기표, 민홍철, 박용갑, 복기왕, 안태준, 엄태영, 이소영, 황운하
-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김도읍, 김희정, 엄태영, 윤재옥, 정점식, 문진석(소위원장), 손명수, 송기현, 윤종균, 이연희, 이춘석, 정준호, 윤종오
- 청원심사소위원회: 엄태영(소위원장), 김은혜, 김정재, 윤영석, 김기표, 복기왕, 송기현, 윤종균, 이춘석, 전용기

16. 정보위원회

- 위원장: 신성범(국민의힘)
- 간사: 선임하지 않음
- 여당(5명): 신성범, 권영세, 김건, 이성권, 추경호
- 야당(7명): 김병기, 박선원, 박지원, 박찬대, 위성락, 이기현, 이인영

17. 여성가족위원회

- 위원장: 이인선(국민의힘)
- 간사: 선임하지 않음
- 여당(6명): 이인선, 김상욱, 서범수, 이달희, 조은희, 한지아
- 야당(11명): 김남근, 김남희, 김용만, 김한규, 백승아, 서영교, 이연희, 임미애, 장철민, 전진숙, 김선민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박정(더불어민주당)
- 간사: 선임하지 않음
- 여당(18명): 김석기, 김성원, 김정재, 박덕흠, 박정하, 서일준,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엄태영, 윤영석, 윤재옥, 이종배, 장동혁, 정점식, 조정훈, 주호영, 한기호
- 야당(32명): 박정, 권한엽, 김병주, 김영진, 김영환, 김태선, 문금주, 박수현, 박지혜, 서영석, 신영대, 안도걸, 오기형, 위성근, 윤준병, 이용선, 이재강, 임미애, 임호선, 정일영, 조승래, 주철현, 한민수,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정아, 서왕진, 윤종오, 이준석, 황운하

2024 최신 입법 트렌드

발행처

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실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8층

의원 입법에 필요한 정부 업무를 지원합니다.
* 의원발의 전·후 법률안 검토 및 부처 간 이견 조정

■ 법제조정총괄법제관	044-200-6802
의원입법 지원 총괄	044-200-6803
이견조정	044-200-6814
의원입법 지원	044-200-6805
법률안 모니터링	044-200-6822
■ 행정법제관	044-200-6568
행정 분야 의원입법 지원(1)	044-200-6804
행정 분야 의원입법 지원(2)	044-200-6809
행정 분야 의원입법 지원(3)	044-200-6812
■ 경제법제관	044-200-6815
경제 분야 의원입법 지원(1)	044-200-6560
경제 분야 의원입법 지원(2)	044-200-6813
■ 사회문화법제관	044-200-6820
사회문화 분야 의원입법 지원(1)	044-200-6810
사회문화 분야 의원입법 지원(2)	044-200-6807

메뉴 바로가기

 OPEN

 공공누리

 저작권

 자유이용허락